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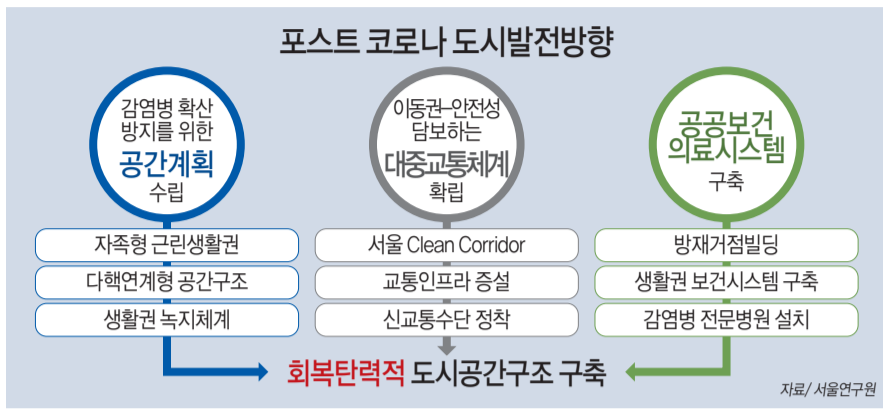
“집 포함 5분 거리서 일반생활 가능해야”

감염병 발발 등 재난대비 ‘회복탄력성’ 구조 강조

서울연구원, 정책자료집 발간
공공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 9개 추진사업 제안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 재난에 대응하는 회복탄력적인 공간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서울연구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자료집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시 인프라는 자족성, 다양성, 연결성을 주축으로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공간 계획 수립 ▲이동권·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 체계 확립 ▲공공



보건 의료시스템 구축 등 3개 분야에서 9개 추진사업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자족형 근린생활권, 생활권녹지체계, 다핵공간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보로 접근 가능한 자족형 근린생활권은 시민들이 비대면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서울은 5개 권역(도심·서북·서남·동북·동남권)을 기준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116개 근린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김인희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감염병이 발발했을 때 집을 포함해 5분 거리의 생활권 내에서 일 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에 116개 지역생활권을 300여개의 역세권과 연결하면 감염병 발생 시 도 보권에서 생활서비스가 가능해져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외사산부터 주거지까지 연계한 생활권 녹지체계는 자연녹지의 생태회 복력을 높여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공기 순환을 유도하는 바람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아울러 연구진은 서울이 대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다핵 도시공간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5개 권역별로 직주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을 펼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이동량을 줄여 에너지도 절약한다는 구상이다.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피현상이 발생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용량을

증대해 혼잡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영준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 실 부연구위원은 “인프라는 순식간에 바꾸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으로 재택근무, 유연근무를 활용해 출퇴근시간대 이동량을 분산하고 근본적으로는 용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획됐지만 추진 못한 사업을 빨리 착수해야 하고 지금까지 적용한 혼잡도 개념도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 의료시스템과 관련해 연구진은 방재거점별당과 감염병 전문 시립병원을 건립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과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공공보건지소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적률 최대 200%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20년만에 개정
준주거지역 300%, 상업지역 600%로

서울의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이 50~200% 상향 조정된다. 또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0년 만에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시 관계자는 “같은 구역,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도 과도한 용적률 차이가 있어 형평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도지역 상향 여부와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은 90%까지 상향된다. 상가 공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도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건폐율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된 기성 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 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재생·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 밖에 과도하게 큰 규모로 지정돼 있거나 분할시행기준이 없어 계획 실현성이 떨어졌던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면적을 축소해 적극적인 개발·관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이 소유해 운영 하는 것보다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는 쪽이 효율적인 시설은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의 부담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실내형 공개공지’도

도입한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휴게공간이나 건물 내부에 만들어진 실내형 공개공지에서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시는 주민 자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스스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이 도와 협력하는 ‘지역메니지먼트’와 주민이 공공에 계획수립을 요청하는 ‘주민제안 관리운영기준’도 신설했다. 후자는 계획관리형·보전재생활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된다.

개정된 지구단위 수립기준에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하는 ‘방재안전계획’,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는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조항과 함께 사후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운영기준도 마련됐다.

시는 전면 재정비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 형태로 작성해 25개 자치구청과 민간도시계획업체, 일반시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경복궁 관람 일시중단 31일 서울 광화문 입구에 경복궁 휴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화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국립고궁박물관, 궁궐과 왕릉 등 실내·외 관람 시설을 6월 14일까지 휴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사례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경찰·자치구 합동조사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결제거부나 추가요금 요구 등 부정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음식점에서 2만원어치 식사 후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2만1000원을 내라고 하거나 기계 오류로 결제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지

불수단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현금화하거나 현금화 해주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부정사례를 목격하거나 겪은 시민들은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서울시, 경찰, 자치구가 합동조사를 벌인다. 부정유통이 확인된 업체는 신용카드 가맹점 취소와 세무조사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관련자들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현정 기자

서초구에 ‘빅데이터캠퍼스’ 분원 조성

서울시 ‘AI양재허브’ 7월 개설

서울시는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를 공유·분석·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캠퍼스’ 분원을 서초구 ‘AI양재허브’에 7월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빅데이터캠퍼스는 본원이 상암동에 있고 본원이 강남 타임타운, 동대문구 서울시립대, 서초구 서울연구원에 있다. 분원에서도 상암동 본원과 같은 빅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대중교통, 유동인구 등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민간 데이터는 물론 생활인구 등 공공 데이터도 열람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번 분원 개설로 기존 양재허

브에 입주한 69개 AI기업과 협업체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빅데이터캠퍼스 분원 추가설치를 계기로 모바일 이용 신청, 데이터 반출 절차 간소화, 신규 데이터 추가 개방,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단축 등 기능도 강화했다.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공공 데이터를 받고 싶은 시민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이번 이용자 편의 개선과 분원 확대로 데이터 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하절기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서울시, 기업·기관 등 대상

서울시는 올 여름 관내 기업들과 기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사업자단체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집중 감축한다는 목표다.

시는 우수한 곳에 상금 최소 5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준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65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울시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만 65세가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최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중증 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지원이 줄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